

민선단체장 취임 100일 후의 지방자치

김정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중국정치·경제(法博)

신광철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1995년 10월 8일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지 100 일을 맞이한 날이었다. 민선단체장 취임 100 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희망적인 평가가 나왔다. 지역주민들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인들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권과 조세권 등 주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선단체장시대의 개막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막을 올렸다. 민선단체장들은 과거의 관선단체장들과는 달리 주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서비스 지향적 행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크고 작은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가동됨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기도 한다.

설문 조사의 개요

지방경제실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100 일을 맞이하여 과연 지방자치의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일반인,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기업인 등 크게 4 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 대상을 나눈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각 집단별로 이해 관계 또는 관심 분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내용도 조사 대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 질문과 각 집단별로 특히 관심이 있는 개별 질문으로 나누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3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론 민선단체장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100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크나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성격상 자치단체로 각종 인·허가권이 이양되고, 주민을 고객처럼 여기는 행정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 관심 사항

발전 전망

현재 민선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은 80.5%가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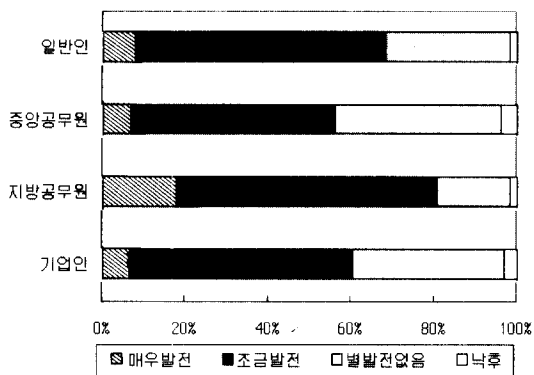
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주역으로서 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발전 전망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낙관적인 의견이 20대(73.3%), 30대(64.9%), 40대(62.9%)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사고를 반영하여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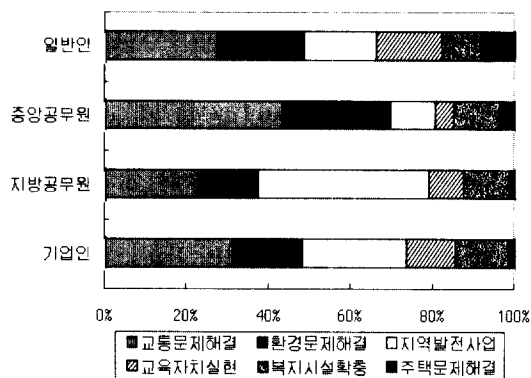
지방정부 사업의 우선 순위

민선단체장 시대에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지역 발전 사업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할 사항은 사업 시행을 담당할 지방공무원들의 관심이 지역 발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지역 발전 사업 41.4% > 교통 문제 해결 22.8% > 환경 문제 해결 14.6%). 지방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교통과 환경 문제를 보다 중시하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1> 3년 후 지역 발전 전망



<그림 2> 지방정부의 사업 우선 순위



지역 발전 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은 전북(43.5%), 대구(35.3%), 대전(30.4%), 강원(30.0%) 순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섬유 산업 쇠퇴 이후 지역경제 회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 문제는 광주(66.7%), 전남(34.6%), 서울(33.6%), 대구(32.4%), 부산(31.4%) 순이며, 환경 문제는 인천(38.2%)이 높아 각 지역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관심 분야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실시를 계기로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방공무원과 기업인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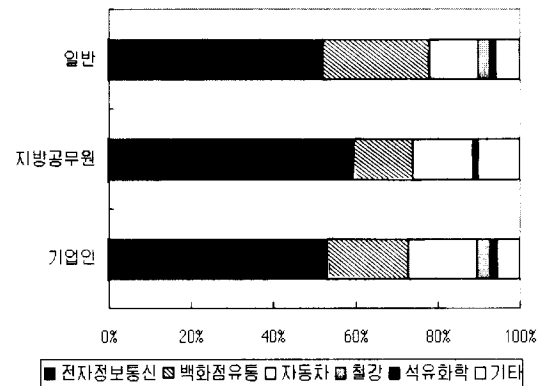
그리고 기업 유치 찬성에 대한 지역별 선호도를 보면 경북(92.3%), 전북(87.0%), 대구(85.3%) 순으로 나타나 경북·대구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 비교적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경공업인 섬유 산업의 쇠퇴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장 산업의 유치가 시급하다는 의식에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 지역은 중앙집권시대에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인해 소외되어 왔고, 그 결과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에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 선호하는 산업은 전자·정보 통신 산업이 가장 높고 다음이 백화점·유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업종이 공해 유발이 없고 향후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표적 공해 유발 업종인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과 같이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은 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 업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사업 등 주민 친화적 경영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림 3> 지역 내 유치 선호 산업



유치 업종에 대한 선호도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자동차는 대구(55.2%)와 부산(36.1%), 전자 정보 통신은 충북(81.3%)과 전북(80.0%), 철강은 강원(12.5%), 백화점 유통은 인천(52.2%), 충남(43.8%)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유치 업종 선호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부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 선호는 성서 공단과 신호 공단에 입주할 대기업의 자동차 공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 지역 주민의 백화점 유통업에 대한 선호는 전국 최고로, 최근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지역 확대에 따른 유통 구매 시설의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을 하는 민선단체장과 소속 공무원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은 대구(82.4%), 충북(70.0%), 대전(65.2%), 경북(64.9%), 부산(64.7%), 경남(61.1%)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독 광주(66.7%), 전북(52.2%), 전남(52.0%) 지역에서는 「정당 활동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 5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 정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선단체장의 정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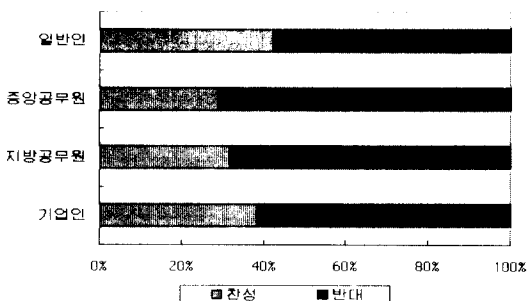
민선단체장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시각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인보다는 중앙과 지방공무원 계층에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적극적인 정당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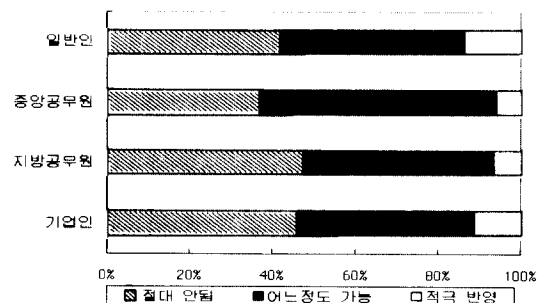
지방행정에 정당 의견의 반영

민선단체장이 정당 활동을 할 경우, 소속 정당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일반인 58.1%, 기업인 51.6%, 중앙공무원 63.2%, 지방공무원 62.7%로 나타나 정당 의견이 지방행정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단체장의 정치 활동



<그림 5> 중앙 정당 의견의 반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57.9%), 대전(56.5%), 대구(52.9%), 경남(50.0%) 순으로 나타나 지방행정에 대한 정당 의견 반영에 부정적인 반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남(28.0%), 인천(23.5%), 서울(2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느 정도 반영되어도 괜찮다」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와 같이 긍정적인 견해는 충남(76.0%), 충북(70.0%), 광주(66.6%), 인천(63.7%), 서울(62.8%), 전남(62.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20대 45.5%, 30대 40.4%, 40대 42.3%, 50세 이상 38.2%) 젊은 층일수록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분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권 이양

지방자치시대 권한 이양의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찰권에 대해서, 경찰 조직은 국가에서 일원화하여 통제하는 것보다는 지방별로 자치적 경찰권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찰권에 대해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한 관계로 대조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경찰제에 대한 지방공무원

들의 입장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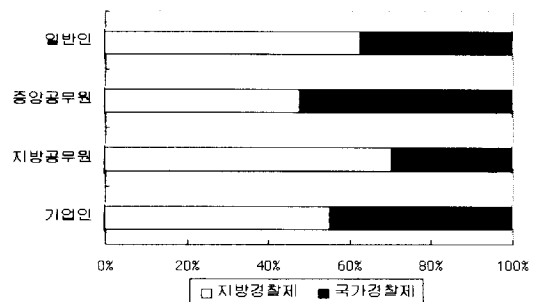
지방경찰제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자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치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조직의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지방경찰제를 선호(20대 67.5%, 30대 61.4%, 40대 62.3%, 50세 이상 58.5%)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경찰제를 선호(20대 32.5%, 30대 38.6%, 40대 37.7%, 50세 이상 41.5%)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층에서 변화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52.9%), 인천(47.1%), 광주(46.7%), 경기(41.5%) 순으로 국가경찰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대전(78.3%), 강원(75.0%), 전남(73.1%), 충북(70.0%), 전북(69.6%) 순으로 지방경찰제를 선호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부산 지역만이 유일하게 국가경찰제의 선호도가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현 정권의 배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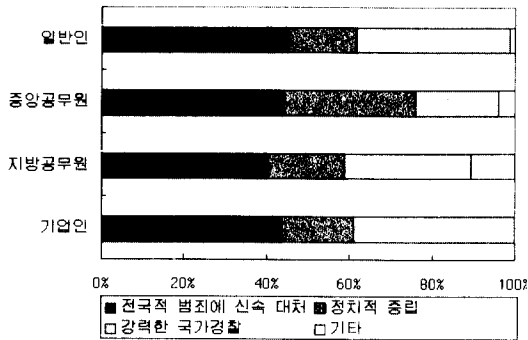
<그림 6> 선호하는 경찰제도



국가경찰제

국가경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전국적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일반인 45.6% > 중앙공무원 44.0% > 기업인 43.6% > 지방공무원 40.4%)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지역주의로 인한 치안 상황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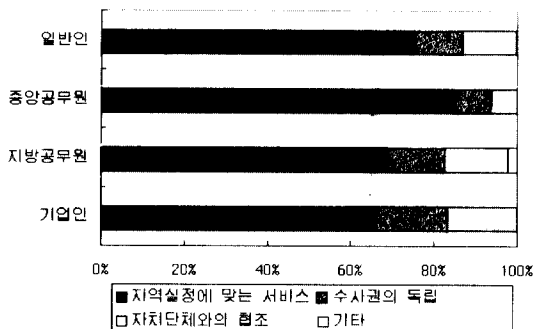
<그림 7> 국가경찰제 선호 이유



지방경찰제

지방경찰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지역 실정에

<그림 8> 지방경찰제 선호 이유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중앙공무원 85.1% > 일반인 75.5% > 지방공무원 69.3% > 기업인 66.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지금까지 국가경찰제의 적용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미비했으며 특히, 중앙공무원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집권적인 치안 체제로 인한 폐단이 존재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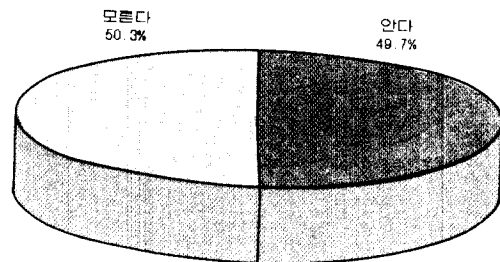
일반인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이나 군수 등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지 100 일이 지난데 불과한 시점에서 절반의 주민이 자기 지역의 단체장 이름을 모른다는 결과는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20대

<그림 9>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58.6%), 50세 이상(51.0%), 30대(44.6%), 40대(43.9%)의 순으로 나와 20대 젊은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반영되고 있다.

지역 크기별로는 모른다는 의견이 대도시(61.0%), 군지역(42.0%), 시지역(38.5%)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주민의 정치적 무관심도가 반영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모른다는 의견이 70.6%로 가장 높게 나와 주거지보다는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도시인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방행정 수행의 원칙

일반인들이 느끼는 지방행정 수행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부정 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행정,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 세금을 적게 걷고 돈을 적게 쓰는 행정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역 발전보다는 깨끗한 행정을 요구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청렴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나타나는 상대적 선호도에서 20대

는 민주적 참여 의식(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행정 34.0%), 30대는 지역 발전 사업(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 수행 25.3%), 40대는 청렴한 행정(부정 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 52.6%) 그리고 50세 이상은 재정적인 문제(세금을 적게 내고 돈을 적게 쓰는 행정 11.6%)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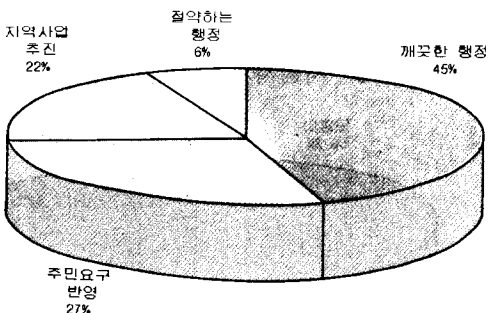
지방자치 이후 행정 서비스의 변화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공무원의 서비스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72.5%)이며 좋아졌다는 의견은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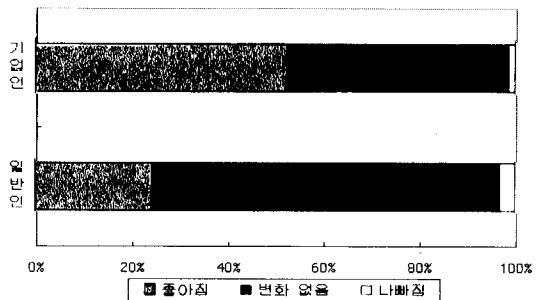
선거 이후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였으나, 그러한 것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은 기업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가 서비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림 10> 지방행정 수행의 원칙



<그림 11> 공무원의 서비스 행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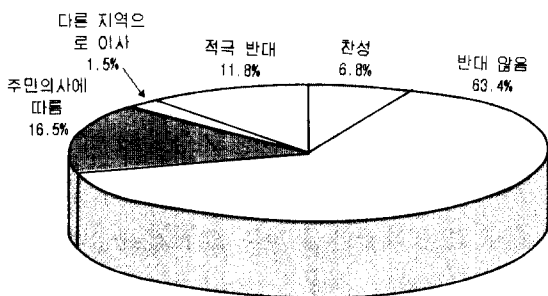


자신과의 이해 관계에 대한 태도

지자체 실시 이후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63.4%)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의 대화와 공해 유발 문제를 해결하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분쟁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소각장 건설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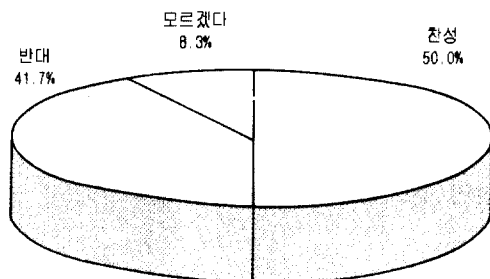


지방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특기 사항은 50세 이상에서 반대 의견이 50.3%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 분포에서 주부의 반대 의견이 52.4%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가계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조세 신설에 대한 의견



중앙공무원

업무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높아진 자치시대에 중앙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수행상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조사 결과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49.5%로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간 잦은 마찰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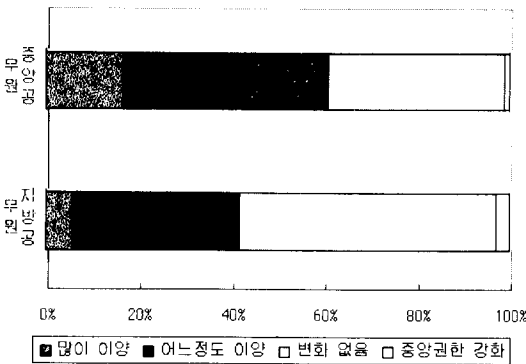
권한 이양

단체장이 지역 발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권한 이양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한 이양 정도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앙공무원은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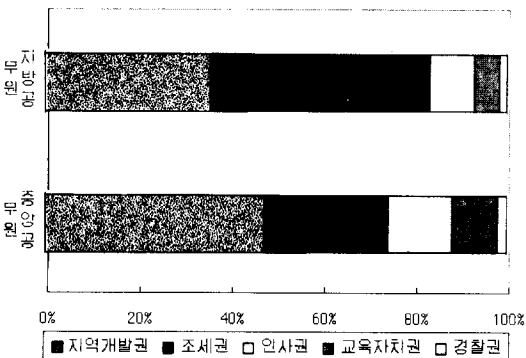
그러나 중앙공무원들 가운데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38.2%로 나타나 지속적인 권한 이양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4> 권한 이양 정도



권한 이양 사항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공무

<그림 15> 우선적 권한 이양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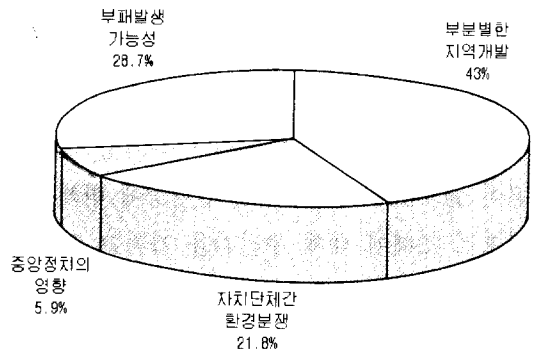
원 모두 지역개발권과 조세권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권한 이양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자치시대에 우려되는 부분

지방자치와 함께 중앙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부정 부패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선단체장이 취임 이후 과거 관선단체장이 수립한 각종 개발 사항을 백지화시키거나 민선단체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리한 개발안이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 부패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우려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이 부정 부패가 없는 깨끗한 행정을 요구(45.6%)한 점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중앙공무원이 우려하는 부분



지방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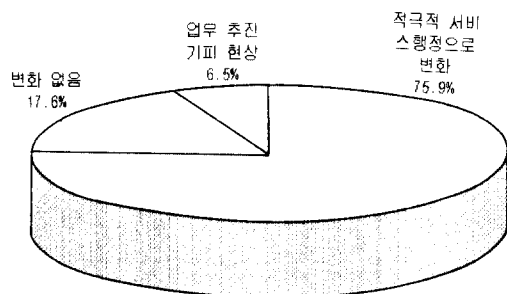
업무량 및 내부 분위기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업무량에 대해서는 많아졌다는 의견이 74.7%로 지배적이었다. 과거 중앙 임명 단체장에 비해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인해 지방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업무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내부의 분위기 변화는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견이 75.9%로 강하게 나타나 앞에서 지역주민이 느끼는 바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1> 참조). 이는 지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개선 의식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도입,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기업 경영인 출신을

<그림 17> 지방정부 내부적 변화



정무 부시장에 임명한다든지 행정 조직을 기업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행정에 기업 경영 방식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결과는 대다수인 96.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한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을 선호(84.0%)함으로써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 이양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시급한 권한 이양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권, 조세권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 구성을 통한 권한 이양의 요구와 개별 접촉을 통한 요구를 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너무 소극적인 방법과 「재판을 통해 권한을 획득한다」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점진적으로 권한을 획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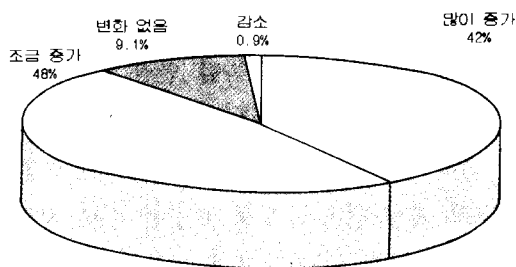
민원 사항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들이 주민 의견 반영 차원에서 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민원의 증가에 대해 설문하였다.

우선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는 민원의 증가에 대한 의견이 90%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가한 민원 사항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19.2%에 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무리한 요구 사항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민원의 증가 정도



기업인

기업 경영

지자체 실시로 지역별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수립되

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 가운데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접촉해야 하는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기업들이 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느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는 업무 수행상 과거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66.2%로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업무 수행이 간편해졌다는 의견이 18.7%로 나타난 반면, 불편해졌거나 어려움이 커졌다는 의견도 15.1%에 달하고 있다.

기업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 절차의 중복성이나 규제 완화의 미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과거와 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1.3%로 지배적이었으나, 환경 분쟁(22.3%), 지역 내 투자 요구(14.4%)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기업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지방자치의 실시와 관련한 향후 기업 경영 전망은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충북 지역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41.7%,

3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도 업체 증가 등과 같이 취약한 지역경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원인으로서는 중복 규제, 준조세 증가, 자치단체와 협조 미흡, 주민 요구 증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 시책 등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정책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중복 규제로 인한 장애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하는 자세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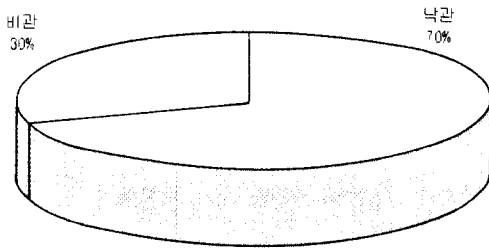
또한 준조세 부담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와 지방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준조세가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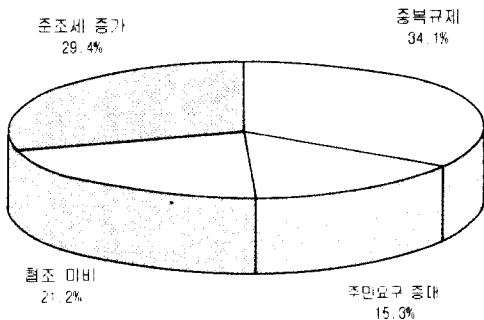
지방자치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인·허가권 이양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지역 SOC 확충, 지역경제 계획의 지속성 유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한 이양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가 5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기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규제의 철폐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 향후 전망



<그림 20> 기업 경영의 저해 요인



<그림 21> 개선 과제

